

2022학년도 일반대학원 학위논문템플릿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위논문 템플릿입니다.

본 템플릿은 신청자의 석사학위논문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음을 밝힙니다(정광필,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 논쟁의 딜레마」, 『역사교육연구』 35, 한국역사교육학회, 2019).

역사학 및 역사교육을 비롯한 인문학 분야의 학위논문에 적합한 템플릿입니다.

- 인용 시 내주가 아닌 각주를 사용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한자어 및 한문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한국학 및 동양학 분야의 논문에 적합합니다.
- 표, 그림이 적고 사료(문헌자료)의 직접 인용이 많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본 양식은 한컴오피스 2018 한글을 사용하여 2023년 1월 작성하였습니다.

- 주로 국문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낮은 버전의 한글에서도 원활히 작동합니다(높은 버전과도 호환됩니다.).

한국출판협회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KoPub 2.0 서체만을 활용합니다.

- 일반대학원 배포 학위논문템플릿의 서체를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 저작권 문제가 없으며, 바탕체와 돋움체만을 사용하여 간결합니다.
- <https://www.kopus.org/biz-electronic-font2-2>

표지, 속표지, 심사완료검인서의 여백 및 규격을 고정하였습니다.

- 표/셀 속성에서 크기를 고정하여 내용 수정 시에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 표/셀 테두리를 투명선으로 처리하여 PDF 변환 및 인쇄 시 보이지 않습니다.
-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작성법의 규격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에 쪽 수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작업하였습니다

- '도구-차례/색인-차례 새로 고침-모든 차례 새로 고침'을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 새로 고침 시 해제된 스타일도 간편하게 다시 입힐 수 있습니다(아래 스타일 설명 참고).
- 단, 본문 이전 목차의 로마 숫자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한글 기능의 한계).

장·절·항제목에는 문단 번호를 적용하여 서식이 자동으로 통일되도록 하였습니다.

- 장·절·항제목에 커서를 두고 '서식-문단번호 적용'을 클릭하면 자동 설정됩니다.
- '서식-한 수준 증가/감소'를 활용하여 장·절·항의 위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새 장·절 아래 1절·1항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단축키 Alt+Shift+Insert를 활용합니다.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템플릿에 파란색으로 기재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식-스타일'을 활용하여 글자모양과 문단모양을 간편하게 입힐 수 있습니다.

- '보기-작업 창-스타일'을 클릭하여 측면에 작업 창을 띄우면 편리합니다.
- 특정 문단에 커서를 두고 입히고자 하는 스타일을 클릭하면 적용됩니다.
- 각 스타일은 논문에서 최초로 활용되는 순서로 배열하였습니다.
- 스타일별 글자모양과 문단모양, 적용요령은 아래 표를 참고(주요 사항 파란 글씨)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글자모양					문단모양		
	글꼴 (KoPub서체)	글자 크기	장평	자간	속성	줄 간격	정렬 방식	여백·들어쓰기 내어쓰기·문단상하
정렬(표 문단·한 줄 띄우기)	바탕체 Light	11pt	100%	0%	-	160%	가운데 정렬	-
	표(글자처럼 취급 시) 가운데 정렬, 본문 한 줄 띄우기(11pt, 줄 간격 160% 기준)에 사용							
표지(○○학위논문·학과·전공·이름·지도교수·학위명·심사)	바탕체 Bold	16pt	100%	0%	-	160%	가운데 정렬	-
표지(논문제목·부제목)	바탕체 Bold	21pt, 18pt 16pt, 14pt	100%	0%	-	130%	가운데 정렬	-
	논문제목과 부제목을 두 줄 이상으로 작성하더라도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정							
표지(논문제목·부제목간여백)	바탕체 Bold	5pt	100%	0%	-	160%	가운데 정렬	-
	논문제목과 부제목 사이에 일정한(5pt) 여백 설정							
표지(고려대학교 대학원)	바탕체 Bold	20pt	100%	0%	-	160%	가운데 정렬	-
표지(제출연월일)	바탕체 Bold	14pt	100%	0%	-	160%	가운데 정렬	-
초록(논문제목국문)	바탕체 Bold	16pt	100%	0%	-	130%	가운데 정렬	-
초록(논문제목영문)	바탕체 Bold	12pt	90%	-10%	-	130%	가운데 정렬	-
	영문제목의 길이를 고려하여 글자 크기, 장평, 자간 조정(필요시 추가 조정 가능)							
초록(이름·학과·전공·지도교수)	바탕체 Medium	11pt	100%	0%	-	180%	가운데 정렬	문단 아래 5pt
	기존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국문양식 유지							
본문앞차례제목	바탕체 Bold	21pt	100%	0%	진하게	180%	가운데 정렬	문단 아래 15pt
	기존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국문양식 유지 • 장제목(21pt)·본문뒤차례제목과 동일							
본문	바탕체 Light	11pt	100%	0%	-	180%	양쪽 정렬	들어쓰기 20pt 문단 아래 5pt
	기존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국문양식 유지							
주제어·Keywords	바탕체 Light	10pt	100%	0%	진하게	160%	양쪽 정렬	내어쓰기 35pt 문단 위 20pt
	주제어·Keyword 내용은 '진하게' 해제 필요							
감사의 글	바탕체 Light	10pt	100%	0%	-	140%	가운데 정렬	
	기존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국문양식 설정 유지							
목차(본문앞·뒤차례제목·표·그림)	바탕체 Bold	10pt	100%	0%	-	160%	양쪽 정렬	
	쪽 번호 로마 숫자 수동으로 기입 필요							
목차(장제목)	바탕체 Bold	11pt	100%	0%	진하게	180%	양쪽 정렬	문단 위 5pt
	쪽 번호 자동 입력 • 시각적 구분을 위해 '진하게' 및 문단모양 조정							
목차(절제목)	바탕체 Medium	10pt	100%	0%	-	180%	양쪽 정렬	왼쪽 여백 10pt
	쪽 번호 자동 입력 • 시각적 구분을 위해 문단모양 조정							
목차(항제목)	바탕체 Light	10pt	100%	0%	-	160%	양쪽 정렬	왼쪽 여백 20pt
	쪽 번호 자동 입력 • 시각적 구분을 위해 문단모양 조정							
장제목	바탕체 Bold	18pt, 16pt	100%	0%	진하게	180%	가운데 정렬	문단 아래 15pt
	장제목 길이를 고려하여 폰트 조정 필요시 글자 크기, 자간, 장평 개별 조정 가능 새 장제목은 새 쪽에서 시작(Ctrl+ENTER 활용)							
절제목	바탕체 Medium	13pt	100%	0%	-	180%	양쪽 정렬	문단 아래 10pt
	장제목과의 시각적 구분을 위해 '진하게' 미설정 새 절제목은 이전 본문과 세 줄 띄우기(스타일 '정렬' 활용)							
항제목	바탕체 Medium	12pt	100%	0%	-	180%	양쪽 정렬	왼쪽 여백 5pt 문단 아래 7pt
	절제목, 본문과의 구분을 위해 왼쪽 여백 설정 새 항제목은 이전 본문과 두 줄 띄우기(스타일 '정렬' 활용)							
각주	바탕체 Light	9pt	100%	0%	-	130%	양쪽 정렬	내어쓰기 13.1pt
	한글 기본양식에 글꼴만 통일							
인용문	바탕체 Light	10pt	100%	0%	-	160%	양쪽 정렬	양쪽여백 25pt 내어쓰기 20pt
	3행 이상의 직접 인용시 활용 가능(3행 미만은 본문 내 쌍따옴표 권장) 인용문 상하 한 줄 띄우기(스타일 '정렬' 활용)							
표·그림제목	돋움체 Medium	10pt	100%	0%	-	160%	가운데 정렬	-
	표 차례, 그림 차례를 활용하기 위해 캡션 활용 • 본문과의 구분을 위해 돋움체 활용							
본문뒤차례제목	바탕체 Bold	21pt	100%	0%	진하게	180%	가운데 정렬	문단 아래 15pt
	본문앞차례제목·장제목(21pt)과 동일							
참고문헌내·부록내제목	바탕체 Medium	13pt	100%	0%	-	180%	양쪽 정렬	문단 아래 10pt
	절제목과 동일							
참고문헌서지사항	바탕체 Light	11pt	100%	0%	-	160%	양쪽 정렬	내어쓰기 40pt 문단 아래 3pt
	Medium	10pt	100%	0%	검정	-	-	-
쪽 번호	기존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국문양식 유지 • 글자 색만 검정으로 수정							

석 사 학 위 논 문

[논문 표지 필수 작성]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과 역사교과서 검정제의 딜레마

[부제목 있을 시 입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과교육학과

정 광 필

2019년 2월

박 현 숙 교수지도

석 사 학 위 논 문

[속표지 필수 작성]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과 역사교과서 검정제의 딜레마

[부제목 있을 시 입력]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과교육학과

정 광 필 (인)

[심사완료검인서 필수 작성]

정광필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함

2019년 2월

위원장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박사의 경우 추가]

[박사의 경우 추가]

[학연산의 경우 추가]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과 역사교과서 검정제의 딜레마

정 광 필

교과교육학과

지도교수: 박 현 숙

국문초록

기존의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연구에서는 대체로 국정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해왔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경향에 기반한다. 첫째,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역사해석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였다. 둘째, 다양한 교과서의 발행을 저해하는 정치권력의 개입 배제와 역사교과서 발행의 자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셋째, 이를 위해서 국정제보다는 검정제, 궁극적으로는 자유발행제의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기 이후 중등 한국사 영역의 교과서가 검정제를 통해 발행되면서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벌어진 ‘편향성’ 논쟁에서는 이러한 연구 경향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딜레마가 포착된다.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은 정치권력이 교과서 발행 절차에 부당한 개입을 지속하고 학계가 그에 반발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학계는 정치권력의 비학문적, 정치적 공격에 대응하여 학문적 비판과 정치적 비판을 병행해야 했다. 그런데 대응 과정에서는 ‘역사해석의 다양성 보장’, ‘역사인식의 차이 용인’, ‘검정의 완화를 통한 자율성 확보’라는 방어의 논리를 강조하기도 했던 반면, 이와는 모순되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해석의 결여’, ‘역사인식의 편향성’, ‘부실한 검정 절차’라는 비판의 논리를 강조하기도 해야 했다. 이는 국정제보다는 완화된, 그러나 자유발행제에 비하면 여전히 강한 통제성을 갖는 검정제의 양면성이 ‘편향성’ 논쟁의 각 국면에서 필요에 따라 강조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검정제의 시행 양상에서 드러난 이상의 딜레마를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의 시야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역사교과서 논쟁에 정치적 입장이 개재되는 것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 특정 입장에서 논쟁을 바라보기보다는 제3의 입장에서 논쟁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논쟁에서의 논리적 일관성을 검토하였고 검정제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살피면서 자유발행제 시행에 대한 당위적 주장이 갖는 맹점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논쟁에서의 논리적 일관성 여부에 주목하다보니 각 입장의 기저에 깔린 역사인식까지 살피며 입체적인 분석을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또한 검정제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원론적인 원칙만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고에서의 논지에 기반하여 특정 역사인식에 따른 역사해석과 교과서 ‘편향성’ 비판의 사례를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후속 연구 이외에도 본고의 시도가 역사교과서 검정제를 비롯한 발행제도 논의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역사교과서, 역사교과서 검정제, 역사교과서 논쟁,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역사인식, '편향성', 다양성, 자율성

[국문초록 필수 작성]

The Controversy over the ‘Bias’ of Korean History Textbooks and the Dilemma of the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 Publication System

by KWANGPIL JUNG

Department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Hyunsook Park

Abstract

In South Korean academia, the ideal publication system for history textbooks is generally believed to be the so-called free publ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is belief, students should be exposed to different viewpoints and diverse interpretations of history through history textbooks. The shift from government-issued textbooks to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is in line with this idea.

However, a controversy over the perceived bias in South Korean history textbooks has arisen between political authorities, who have continually interfered in the textbook publication process, and academics, who opposed such interference. To counter non-academic and political attacks from political authorities, scholars have adopted a dual approach of producing academic criticism and taking political measures against the attacks. In this process, academics have defended their position by emphasizing the need to guarantee a diverse interpretation of history, to accept different views of history, and to ease the government’s supervision of history textbook production. At the same time, they have attacked the views of political authorities by pointing out an apparent lack of objectivity and balanced interpretation,

biased historical perception, and an inadequate textbook authorization process.

This paper explores the dilemma of the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 publication system through the view of bias in Korean history textbook.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discussion by addressing vulnerabilities in the arguments of the free publication system and by highlighting practical and specific problems to be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of the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the logical consistency of each argument in the controversy over perceived bias in textbooks, and therefore be limited in providing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underlying perceptions of history. Further research on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s and descriptions of historical events according to textbook critics' perspectives of history may strengthen the findings of this paper and cultivate discussions o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 system.

Keywords: History Textbooks, History textbook screening system, The controversy over history textbooks, History textbook publishing system, Historical perspective, 'Bias', Diversity, Autonomy

[영문초록 필수 작성]

[감사의 글 선택 작성]

감사의 글 작성 시 ENTER를 적절히 활용하여 페이지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한다.

감사의 글(dedication page) 제목은 생략하여 목차에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졸업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후원해주신 지도교수님 이하 학과 교수님들,
아낌없는 도움을 준 대학원생 동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문

역사교사를 꿈꾸며 역사교육과 입시를 준비하던 2008년,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좌편향’ 논쟁이 벌어졌다. 이때, 나는 해석의 학문인 역사에 있어서 역사인식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역사인식이 ‘편향성’을 갖는다는 비판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집필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깨닫게 되었다.

역사교육을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2013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논쟁이 터져 나왔다. 이때, 나는 역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역사교과서 집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그러나 한편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 반대”라는 구호의 적절성에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좌편향’ 비판과 입장만 반대일 뿐 역사인식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비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역사인식의 ‘편향성’을 이유로 역사교과서 서술을 문제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역사교육전공으로 대학원 진학을 확정하고 학부 졸업을 앞둔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이때, 역사교육 전공자인 나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내세워 역사교육을 획일화하려는 정부의 노골적 책동은 역사교과서 집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해석의 학문인 역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역사인식에 “올바른”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려는 시도 자체를 비판해야 했다. 그러나 또다시 부각된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구호는 “올바른”이라는 잣대를 거부하는 비판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주장하는 방식이었다.

이때만 해도 나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쟁을 역사교과서 집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주장하는 역사교육계(역사교사·역사교육 연구자·역사학자) 對 역사교과서 집필 및 역사교육 전반에 개입하려는 정치권력의 구도로만 이해하였다. ‘좌편향’ 비판이든, ‘친일·독재 미화’ 비판이든 역사인식의 ‘편향성’ 지적은 정치권력의 수사일 뿐,

역사교육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대학원생으로서 역사교육연구를 두루 섭렵하기 시작하자, 나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쟁에 있어서 역사교육계의 논의 궤적 또한 심도 있게 탐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모 역사학자의 지적대로 역사인식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방식이 정치권력뿐 아니라 역사교육계에도 깊이 ‘침윤’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좌편향’이라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내세우던 역사교육계가 ‘친일·독재 미화’라는 비판을 부각하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부차화했다는 지적 또한 한 역사교육 연구자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이 단계에 이르러 나는 역사교육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교육이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달리 말해 역사교육 행위는 특정한 목적의식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역사교과서는 특정한 가치관·세계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기보다는 역사교과서 ‘편향성’ 논쟁을 다시금 되짚어 보며 역사와 정치의 ‘얽힘’이 어떤 방식으로 분출되었는지 고찰하기로 하였다.

역사교육학은 역사학을 모(母) 학문으로 함에도 그간의 역사교육연구에서 역사교육사, 즉 역사교육의 역사에 대한 탐구는 미흡하였다. 역사교육의 바람직한 미래를 논하는 주장은 이미 풍성하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역사교육의 ‘바람직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자기 성찰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역사교육이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 믿는다.

[서문 필요시 작성]

학위논문에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수행된 결과가 포함되거나, 저자가 출판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서문에 작성하여야 한다. 서문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서문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관련 사항을 본문의 서론에서 언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수행한 작업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기여도와 비율 및 저자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 ② 논문의 일부분이 이미 출판되었거나 준비 중인 부분에 대한 설명 및 출판물에 대한 모든 사람의 기여
- ③ 이외에도 논문작성 관련 개인적 상황 및 정보(personal information), 주제 선택 동기(motivation), 저자 관점, 감사 및 사사(acknowledgments)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서문 작성 예

https://www.grad.ubc.ca/sites/default/files/doc/page/thesis_sample_prefaces.pdf

<https://www.phase-trans.msm.cam.ac.uk/2002/thomas/chapter1.pdf>

사사

이 논문은 2018학년도 2학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을 통해 수료연구생 연구
장려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사사 선택 작성]

서문(preface)에서 사사(acknowledgments)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Abstract	iii
서문	vi
사사	viii
목차	ix
표 목차	xi
그림 목차	xii
기호 설명	x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1) 연구의 배경	1
2) 선행연구 검토	2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II. 제7차 교육과정기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쟁	7
1. 논쟁의 정치화	8
2. 역사인식 비판의 맹점	9
3. ‘편향성’ 비판의 맥락	10
III. 2009 개정 교육과정기 검정 교학사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논쟁	11
1. 정치권력의 검정 과정 개입	12
2. ‘친일·독재 미화’ 비판의 딜레마	13
3. 검정 취소 요구의 딜레마	14
IV.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15
1. 정치권력의 개입 강화와 국정화	17
2.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부정	17
3. “올바른” 역사인식 비판의 딜레마	18
V. 결론	21

참고문헌	24
부록	31
색인	32

[목차 필수 작성]

쪽 번호는 초록부터 본문 전까지 작은 로마 숫자(Roman numerals, e.g., i, ii, iii, iv...)를 사용한다. 본문의 서론부터 아라비아 숫자(Arabic numbers, e.g., 1, 2, 3...)를 사용한다.

위의 목차는 스타일 “장제목”, “절제목”, “항제목”, “본문뒤차례제목” 스타일이 적용된 각종 제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한글에서는 로마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므로 “본문앞차례제목” 스타일의 경우 로마 숫자를 수동으로 입력해줘야 한다.

목차는 초록부터 작성한다. 목차에도 각 항목에 맞는 스타일을 적용해주고, 본문의 장·절·항 항목 앞과 뒤로는 한 줄씩 띄어 시각적 구분을 해준다. 이때, 쪽 번호 자동 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기-표시/숨기기-조판 부호’를 켜 상태에서 목차의 앞과 뒤에 있는 조판 부호(주황색 [차례 시작]·[차례 끝])가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쪽 번호가 변경된 경우 ‘도구-차례/색인-차례 새로 고침-모든 차례 새로 고침’을 클릭하면 쪽 번호가 목차에도 자동 반영된다. 이때, 스타일 지정은 다시 해주어야 한다.

표 목차

[표 1]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18
----------------------------------	----

[본문에 표가 있는 경우 작성]

위의 표 목차는 표의 캡션(표 제목)에 [표 번호]가 설정된 모든 표 제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표 제목을 수정할 때 '보기-표시/숨기기-조판 부호'를 켜 상태에서 표의 캡션(표 제목)에 있는 조판 부호(주황색 [표 번호])를 삭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본문을 한글로 작성한 경우에도 표 제목은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그림은 본문 전체에 대해 연속적인 번호를 부여(1, 2, 3, 4, 5...)하거나, 각 장(Chapter)에 기반하여 번호를 부여(1.2, 1.2, 2.1, 2.2...)할 수 있다. 쪽 번호가 변경된 경우 '도구-차례/색인-차례 새로 고침-모든 차례 새로 고침'을 클릭하면 쪽 번호가 표 목차에도 자동 반영된다. 이때, 스타일 지정을 다시 해주어야 한다.

그림 목차

[그림 1]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한겨레신문)	15
--------------------------------------	----

[본문에 그림이 있는 경우 작성]

위의 그림 목차는 그림의 캡션(그림 제목)에 [그림 번호]가 설정된 모든 그림 제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그림 제목을 수정할 때 '보기-표시/숨기기-조판 부호'를 켜 상태에서 그림의 캡션(그림 제목)에 있는 조판 부호(주황색 [그림 번호])를 삭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본문을 한글로 작성한 경우에도 그림 제목은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그림은 본문 전체에 대해 연속적인 번호를 부여(1, 2, 3, 4, 5...)하거나, 각 장(Chapter)에 기반하여 번호를 부여(1.2, 1.2, 2.1, 2.2...)할 수 있다.

기호 설명

[기호 설명 선택 작성]

기호 설명에는 필요한 경우 첨자 설명 및 약어 설명을 포함한다. 본문을 한글로 작성한 경우에도 기호 설명은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역사교과서에 관한 논의에서 기존의 성전적(聖典的) 역사교과서관에 대한 비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역사학계의 통설(通說)·정설(定說)을 담은 역사교과서가 최선의 교재라는 인식은 다원적 관점을 강조하는 풍조 속에 쇠퇴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경향이나 역사교육의 내용으로 역사인식론 혹은 역사학의 탐구과정 그 자체를 주목하는 경향은 교과서의 내용을 고정된 역사지식 위주로 구성하는 것의 맹점을 더욱 부각하였다.

… (중략) …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변천은¹⁾ 대개 정부의 개입이나 사회의 변화라는 배경 속에서 설명된다.²⁾ 예를 들어, 교수요목기와 제1·2차 교육과정기에 검정제를 통해 발행된 중등 국사 교과서는 제3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 국정 단

-
- 1)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변천 전반을 정리한 연구로는 해방 후부터 제5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국사 교과서 발행제도를 대상으로 한 김한중의 연구, 해방 후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를 검토한 박진동의 연구, 미군정기부터 민주화 이후 시기까지의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한국사 교과서 발행제도의 흐름을 다룬 이신철의 연구가 있다. 한편, 이찬희·류승렬은 박진동의 연구를 인용한 후 추가로 2009 개정 교육과정기까지의 (한)국사 교과서 발행제도의 변천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 비판한 김한중의 저서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의 역사를 중심으로 발행제도의 변천이 다루어지기도 하였다(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비평』 15, 역사비평사, 1991; 『역사 교과서 국정화, 왜 문제인가』, 책과함께, 2015; 박진동, 「해방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이신철, 앞의 논문, 2009; 이찬희 외, 「국사 교과서 발행제도와 검정제의 검토」(연구보고서 11-02), 미래한국재단, 2011).
 - 2) 김한중, 위의 논문, 1991; 「한국사 교과서 검정 파동의 원인과 과제」, 『역사와 현실』 92, 한국역사연구회, 2014, p.25; 위의 책, 2015, pp.81-143; 류승렬, 「국사 교과서 편찬과 자유발행제」, 『한국사론』 31, 국사편찬위원회, 2001, p.112; 「한국사 교과서 발행 국정화 담론의 맥락과 성격」, 『역사교육』 132, 역사교육연구회, 2014, p.291; 박진동, 위의 논문, 2004; 이신철, 위의 논문, 2009; 김정옥, 「역사 교과서 논쟁에 관하여 미국의 교과서 발행제도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역사와 문화』 26, 문화사학회, 2013, p.22; 양형연, 「한국사 교과서 발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역사와 현실』 92, 한국역사연구회, 2014b, pp.203-209; 하일식, 「교과 '국사'의 발행제 변천과 전근대 서술 - 권력의 의도와 교과서 서술 -」, 같은 책, 2014, pp.55-63; 양호환, 「역사 텍스트 독해를 둘러싼 동향과 쟁점」, 『역사교육』 142, 역사교육연구회, 2017, pp.261-263.

일본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변화는 유신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³⁾ 그리고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 중등 한국사 영역에서 국정교과서의 발행이 유지되다가, 제7차 교육과정기부터 일부 검정화되고,⁴⁾ 2007 개정 교육과정기 이후 중등 역사교과서의 발행이 전면 검정화되는 과정은 민주화 이후의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⁵⁾ 또한, 2015년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기존의 검정 『한국사』 교과서 서술과 집필진의 ‘편향성’을 빌미로 당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였다.⁶⁾

2) 선행연구 검토

이러한 발행제도 변천의 배경 아래에서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연구의 상당수는 국정제 비판에 치중해야 했다. 우리나라의 국정제는 유신 정권에서 국사를 정치도구화 한 결과물로 인식되었고,⁷⁾ 외국의 국정제는 독재국가에서나 채택하는

-
- 3) 박준성, 「올바른 역사 이해와 ‘국정’ 국사교과서의 문제점」, 『교과교육』 1, 푸른나무, 1988, pp.171-176; 류승렬, 「국사교과서 편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역사교육』 76, 역사교육연구회, 2000, pp.81-83; 위의 논문, 2001, pp.109-111; 윤종영, 「국사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고찰」, 『문명연지』 1-2, 한국문화학회, 2000, pp.77-80; 신병철, 「국정 국사 교과서 개발 과정과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역사교육』 79, 역사교육연구회, 2001, pp.164-165; 박진동, 위의 논문, 2004, pp.35-41; 이병희, 「국사교과서 국정제도의 검토」,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p.75; 서인원, 「역사교과서 검정발행제 분석」, 『역사와 실학』 32, 역사실학회, 2007, p.841; 이신철, 위의 논문, 2009, pp.104-107; 김정옥, 위의 논문, 2013, 같은 쪽; 양정현, 위의 논문, 2014b, p.203; 하일식, 위의 논문, 2014, pp.55-61; 김한중, 위의 책, 2015, pp.104-120; 양호환, 위의 논문, 2017, p.261.
- 4) 제3차 교육과정기 이후 국정 단일본으로 편찬되었던 중등 국사 교과서 중에서 근·현대사 부분만을 심화하여 다룬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이 검정화 되었는데, 박진동은 이를 ‘일부 검정화’라고 명명한 바 있다(박진동, 위의 논문, 2004, pp.41-43).
- 5) 박진동, 위의 논문, 2004, pp.41-47; 이신철, 앞의 논문, 2009, pp.107-111; 김정옥, 앞의 논문, 2013, 같은 쪽; 「미국 역사교과서 논쟁을 통해 본 교과서 발행제도의 문제: 한국의 역사교과서 논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총』 8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5, p.228; 양정현, 앞의 논문, 2014b, p.209; 하일식, 앞의 논문, 2014, pp.61-63; 김한중, 앞의 책, 2015, p.147.
- 6) 고영진, 「[시론] 개봉박두! ‘국정교과서의 추억」, 『역사와 현실』 91, 한국역사연구회, 2014, pp.10-13; 서인원, 「중등 “역사”·고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론」, 『역사와 실학』 58, 역사실학회, 2015, pp.297-299; 김한중, 위의 책, 2015, p.131; 최영진, 「역사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한계」, 『의정연구』 47,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6, pp.204-205, 김민수, 「역사교과서 서술의 교재화」, 『역사교육연구』 28, 한국역사교육학회, 2017, pp.213-214.
- 7) 박준성, 앞의 논문, 1988; 김한중, 앞의 논문, 1991, pp.75-81; 류승렬, 앞의 논문, 2000, pp.81-85; 앞의 논문, 2001, 같은 쪽; 윤종영, 앞의 논문, 2000; 신병철, 앞의 논문, 2001, 같은 쪽; 이신철, 앞의 논문, 2009, pp.104-106; 하일식, 앞의 논문, 2014, pp.55-58.

것으로 이해되었다.⁸⁾ 따라서 국정제는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특히 80년대 말부터 그러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⁹⁾

… (중략) …

그러나 국정제가 폐지되고 검정제로 전환된 이후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벌어진 논쟁의 양상은 이상의 연구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한다. 첫째,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면 교과서 발행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이 과연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유발행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이른바 ‘좌편향’, ‘친일·독재 미화’로 지목된 교과서 역시 현장에서 얼마든지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른바 ‘편향성’ 논쟁에서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양상이 지속된다면 자유발행제 아래에서도 그러한 교재의 사용에 아무런 논란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저해되는 것을 정치권력의 개입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2015년 당시 국무총리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근거로 다양성을 표방한 검정교과서가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⁰⁾ 물론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어떠한 다양성이라는 구호를 정치권력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자는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담론이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논리로 활용되었음과 동시에 국가주의적 사

8) 윤종영, 위의 논문, 2000, p.81.

9) 박준성, 앞의 논문, 1988, pp.171-179; 김한중, 앞의 논문, 1991: 위의 책, 2015; 김육훈, 「국사 교과서 어떻게 만들어지나 - 국정제의 허와 실」, 역사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살아있는 삶을 위한 역사교육』, 푸른나무, 1993; 류승렬, 앞의 논문, 2000, pp.82-85; 앞의 논문, 2001, pp.109-126; 앞의 논문, 2014; 신병철, 앞의 논문, 2001; 서인원, 앞의 논문, 2007, pp.841-843; 앞의 논문, 2015; 이찬희 외, 앞의 글, 2011, pp.102-104; 양정현, 앞의 논문, 2014b, pp.202-209; 하일식, 앞의 논문, 2014; 최영진, 앞의 논문, 2016, pp.205-207.

10) 국무조정실, “황 총리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15년 11월 6일, http://www.korea.kr/policy/cultureView.do?newsId=148802862&call_from=naver_news (“... 전국에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적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다양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

관에 기초한 검정교과서를 지지하는 논리로도 활용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¹¹⁾

셋째, 교과서 발행에서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異論의 여지가 없는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검정교과서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역사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이라는 검정제의 취지 아래에서도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이 지적된 맥락은 어떠했는지, 검정교과서의 다양성을 제약해야 했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의 확대라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상의 의문을 바탕으로 본고는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을 다시 되돌아보고, 지난 검정제 시행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을 하나의 흐름을 갖는 사건으로 규정할 것이다. 첫째, 논쟁의 주된 대상이 한국사 영역, 그중에서도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으며, 논쟁의 구도는 ‘좌·우’¹²⁾ 이념 대립의 형태를 띠었다.

… (중략) …

본고에서도 역사교과서 논쟁에 정치적 입장이 개재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관점을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에서의

11) 백은진, 「무엇을 위한 역사교육이어야 하는가? - 국가교육과정, 정부의 역사교육 정책, ‘국가주의’ 비판 담론에 대한 분석」, 『역사교육연구』 22, 한국역사교육학회, 2015, p.309.

12) 좌·우(파), 진보·보수 등 정치적 성향을 구분하여 지칭하는 이러한 용어들은 엄밀한 의미를 갖는 개념은 아니다. 또한, 상대 입장에 대한 卑稱으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편향성’ 논쟁을 다루고 있기에 간혹 어떤 방식으로든 특정 입장을 지칭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좌편향’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입장을 ‘진보’라는 용어를 통해, ‘친일·독재미화’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입장을 ‘보수’라는 용어를 통해 지칭하고자 한다. 그러나 특정 정치적 성향에 대해 是非를 가리는 것이 본고에서 지향하는 바는 아니기에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입장에 대한 好惡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범위 밖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걸맞게 재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 입장에 서기보다는 그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논쟁을 조망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역사인식 혹은 역사해석의是非를 가리는 논쟁의 양상이 야기한 검정제 시행상의 딜레마를 부각하고자 한다. 특히 역사해석의 다양성과 역사교과서 발행의 자율성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정제를 폐지하고 검·인정제와 자유발행제로 나아갈 것을 주장해온 기존의 연구 경향을 염두에 두면서 교과서의 ‘편향성’을 비판하는 논리가 갖는 맹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관련된 학술적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이 어떤 논리를 바탕으로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볼 것이다. 각 시기를 논쟁의 대상이 된 교과서를 기준으로 삼아 제7차 교육과정기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쟁, 2009 개정 교육과정기 검정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논쟁,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각각의 논쟁에서 개별적으로 드러난 연구자들의 논리를 분석하면서도, 연속된 논쟁의 시야에서 ‘편향성’이라는 비판의 논리가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검정제의 취지와 딜레마를 형성하는 양상을 고찰해볼 것이다.

본고의 분석에서 주로 활용하게 될 연구 자료는 학계 연구자들이¹³⁾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에 참여하면서 집필한 문헌 자료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집필한 논문, 학술지에 게재된 글, 정식 출판물로 제작된 서적 등 특정 교과서에 대한 비판 혹은 지지의 논지가 담긴 문헌에 해당한다. 다만 문헌 자료 분석 이외에 논쟁의 경과를 소개할 때에는 관련된 언론보도나 정부기관의 공고문 등을 제시하기도 할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의 논의 역시 대안 교과서의 출간, 교학사 교과서와 국정교과서의 발행 및 그 절차의 부당성에 대한 비판의 전제 위에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본론에서도 그러한 비판의 시각을 분명히 하며 논의를 전개할

13) 여기서 ‘학계 연구자’는 역사교육학 혹은 역사학 연구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의 분석에서 활용하게 될 연구 자료가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이 집필한 학술적 문헌인 만큼,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해당 문헌을 집필한 학자를 통칭하여 ‘학계 연구자’라고 하였다. 따라서 역사교육학계 혹은 역사학계를 언급하고자 할 때는 혼란이 없도록 분명하게 ‘역사교육학계’, ‘역사학계’로 지칭할 것임을 밝혀둔다.

것이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국정화 시도가 중단되고 검정제의 시행이 명확해 보이는 상황에서 국정화 비판의 단순한 재론(再論)은 불필요할 것이며 검정제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과서 발행에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자유발행제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기존의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연구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의 논리에서 포착되는 검정제 시행상의 딜레마를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렇기에 어떠한 입장이 타당한지를 논하기보다는 각각의 입장이 갖는 논리적 일관성 여부에 좀 더 주목할 것이다. 나아가 검정제의 딜레마를 바탕으로 자유발행제 시행에 대한 당위적 주장이 갖는 한계 역시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검정제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II. 제7차 교육과정기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쟁

검정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에¹⁴⁾ 참여한 연구자들의 논문은 2008년과 2009년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이전까지는 주로 보수적 성향의 정치권과 언론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지속해서 문제 제기해왔다. 2002년 ‘전정부·현정부 편향성 논란’ 관련 언론 보도,¹⁵⁾ 2004년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권철현 의원의 ‘반미·친북·반재벌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¹⁶⁾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그러나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이에 2005년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은 자체적으로 ‘교과서포럼’을 창립하여 대안 교과서의 집필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08년에 이르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좌편향’ 문제 제기에 호응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권고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당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른바 ‘교과서 연수’를 열었는데 사실상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교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¹⁷⁾

14) 해당 논쟁의 경과를 정리한 글로는 김한중,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의 전말과 쟁점」, 『역사와 세계』 35, 효원사학회, 2009a, pp.3-15;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pp.455-478; 양정현,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 사실과 관점 -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지시 파동을 중심으로 -」, 『역사와 세계』 35, 효원사학회, 2009, pp.35-42; 윤종배, 「역사 교과서 파동의 전말과 우리의 대응」, 『내일을 여는 역사』 35,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정태윤, 앞의 논문, 2012가 있다. 또한, 해당 논쟁을 일지 형식으로 정리한 이성호, 「『한국사 교과서 논란』 관련 일지」, 『역사와 교육』 9, 역사교육연구소, 2014, pp.292-293이 있다.

15)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검정에 1차로 합격한 4종의 교과서 전시본이 나온 2002년 7월, 조선일보에서 “일부 교과서가 김영삼·노태우 정부 등에 대해서는 공과(功過)를 두루 언급한 반면, 김대중 정부는 개혁과 남북화해에 앞장섰다는 등 주로 치적 부문만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논란으로 비화되었다(양근만, “‘끝나지 않은 현정권’ 내년 교과서에 미리 평가 논란 - YS정부 공과 두루 언급 DJ정부 업적 위주 나열”, 『조선일보』, 2002년 7월 30일, 2면).

16) 국회사무처, 「2004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피감사기관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10월 4일, pp.59-60(“금성출판사가 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책입니다. ... (현대사의 발전 부분에) 주로 대한민국의 민중들이 겪어온 부분들, 거기에 비해서 북한의 사상들에 대해서는 칭찬 일변도로 나오고 ...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이 나라의 발전 모델이 북한이 되는 것은 아닌가, ... 또, 반미·친북·반재벌의 시각으로 일관함으로써 ... 광복 이후의 남한의 역사는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반면 북한 부분은 마치 민족자존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체제인 것처럼 우호적이고 중립적인 기술로 완전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17) 박선하 기자, “교장·학부모 ‘교과서 연수’ 논란”, 『MBC NEWS』, 2008년 11월 10일, http://imnews.imbc.com/replay/2008/nwdesk/article/2237494_18843.html(당시 교육감은 해당 연수

교과서포럼에서 대안 교과서를 출간한 시기 역시 이때였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을 비판했던 연구자들의 글도 주로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¹⁸⁾ 이들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의 ‘좌편향’을 비판하며 바람직한 교과서 서술은 어떤 것인지,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앞둔 때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집필했거나 지지했던 연구자들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가해졌던 ‘좌편향’ 비판을 반박하면서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검정 방향을 제시하였다.¹⁹⁾ 정치권과 언론의 이슈였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은 정권교체에 뒤따른 정치권력의 개입 속에서 학계의 ‘편향성’ 논쟁으로까지 확산되었던 것이다.

1. 논쟁의 정치화

‘정치적’ 혹은 ‘이념적’이라는 표현은 상대 행위의 이면에 깔려있는 부당한 목적·방법 등을 비판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는 수사이다. 또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의 전 시기에 걸쳐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비판하는 입장이든 지지하는 입장이든 표

에서 “많은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한쪽으로 편향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18) 박효종 외, 『빼앗긴 우리 역사 되찾기 : 교과서포럼이 해부한 ‘왜곡’의 진상』, 기파랑, 2006; 정경희, 앞의 논문, 2008; 김주환,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쟁과 개편방향 -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7-1, 대한정치학회, 2009; 이명희·강규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회과교육』 48-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9; 김낙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역사인식 : 생산적 논쟁을 위하여」, 『현대사광장』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3.

19) 김성보, 「[책머리에] 역사교과서, 진정 무엇이 문제인가」, 『역사비평』 85, 역사비평사, 2008; 김한중, 앞의 논문, 2009a; 양정현, 앞의 논문, 2009; 역사교육연대회의,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서해문집, 2009; 윤중배, 앞의 논문, 2009; 임경석, 「[여는 글] 위기의 역사 교과서」, 『내일을 여는 역사』 35,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지수걸, 「‘한국 근현대사 논쟁’과 10학년 『역사』 교과서 편찬」, 『역사교육』 109, 역사교육연구회, 2009; 정태윤, 앞의 논문, 2012.

면적으로는 모두 상대방이 이념적인 차원에서 논쟁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양상이 포착된다. 그러나 입장의 차이에 따라 이들이 ‘정치화’의 시발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는 상이하다.

… (중략) …

한편, 양측은 모두 논쟁이 정치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논쟁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기서 생산적인 방향이란 곧 학문적인 차원에서 논쟁에 접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지지자들은 “정치적인 논쟁”과 “학문적인 논쟁”을 대조시키면서 학문적인 차원에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²⁰⁾ 반면, 교과서를 비판자들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집필자들이 “학문적 양심”에 근거하여 근·현대사 서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²¹⁾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달랐던 만큼 학문적 논쟁 혹은 생산적 논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2. 역사인식 비판의 맹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입장이 어떠하였든 양측은 모두 논쟁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비판자들은 논쟁이 역사교육의 당사자인 교사나 학생을 배제하고 전개되었음을 지적하거나,²²⁾ 논쟁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겉돌다보니 논쟁다운 논쟁이 벌어진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다.²³⁾ 반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지지자들은 논쟁을 거치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점에 의의가 있기에²⁴⁾ 논쟁 자체를 거부

20) 김한중, 앞의 논문, 2009a, 같은 쪽; 지수걸, 앞의 논문, 2009, 같은 쪽.

21) 이명희·강규형, 앞의 논문, 2009, p.103.

22) 정경희, 앞의 논문, 2008, 같은 쪽.

23) 김낙년, 앞의 글, 2013, p.27.

24) 김한중, 앞의 논문, 2009a, p.2.

할 것이 아니라, 논쟁의 성과를 어떻게 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화시킬 수 있을지에 주목하였다.²⁵⁾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학문적인 차원에서 논쟁에 접근하는 것을 생산적인 논쟁을 위한 방향이라고 보았다.

… (중략) …

그런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지지자들도 교과서 비판자들의 역사인식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지지의 논리는 검정교과서에 담긴 역사인식이나 관점을 문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3. ‘편향성’ 비판의 맥락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교과서 서술의 ‘좌편향’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도 ‘좌편향’적인 서술에 대한 비판이 핵심이었다. 마찬가지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비판자들 역시 교과서 서술의 ‘편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 (중략) …

한편, 뉴라이트 역사인식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은 그러한 역사인식을 담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편향성’을 지적하는 정치적 논쟁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교학사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논쟁에서 제시된 논리들을 검토하면서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논쟁이 해당 국면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5) 지수걸, 앞의 논문, 2009, pp.275-276.

III. 2009 개정 교육과정기 검정 교학사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 논쟁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이 2011년 부분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에는 새로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심의 본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기서 이른바 ‘뉴라이트’ 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가 심사에 통과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²⁶⁾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8월 검정 최종 결과를 발표한 후 검정교과서의 전시본을 배포하지 않고 웹으로만 공개하자 진보적 성향의 언론은 국회를 통해 교과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후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이 ‘친일·독재 미화’에 치중해 있다며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갔고,²⁷⁾ 당시 야당은 검정 취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²⁸⁾

이러한 맥락에서 학계의 연구자들은 주로 2013년과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 논쟁과 관련한 글을 발표하였는데, 대부분 교학사 교과서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였다.²⁹⁾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에는 주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비판자들이 참여했기에 교학사 교과서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은 주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지지자들이었다.

그런데 검정교과서에 대한 비판과 지지의 입장이 뒤바뀌었음에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 논리는 언뜻 보기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비판 논리와 유사한

26) 송현숙 기자, “[단독]뉴라이트가 만든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경향신문』, 2013년 5월 31일, 1면.

27) 송현숙·백승찬 기자, “‘검정 통과’ 뉴라이트 교과서, 한·일 협정, 5·16 등 박정희 시대 미화 크게 늘어”, 『경향신문』, 2013년 8월 30일, 8면.

28) 김관영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민주당 공보실, 2013년 9월 3일,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20712 (“정부는 반민주·반민족 뉴라이트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즉각 취소해야”).

29) 김승은, 「이명박 정권 이후 보수세력의 역사왜곡」, 『내일을 여는 역사』 52, 내일을 여는 역사, 2013; 이기훈, 「그들의 대한민국 역사: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인식」, 『진보평론』 58, 진보평론, 2013; 이신철, 앞의 논문, 2013; 이준식, 「한국 역사 교과서인가, 아니면 일본 역사 교과서인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일제강점기 서술 비판」, 『역사비평』 105, 역사비평사, 2013; 지수걸, 「교학사판 『한국사』의 논리와 책략」, 『역사비평』 105, 역사비평사, 2013; 고영진, 앞의 논문, 2014; 권오현, 앞의 논문, 2014; 김한중, 앞의 논문, 2014; 양정현, 「역사교육에서 사실, 해석, 그리고 주체와 관점 -2013년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91, 한국역사연구회, 2014a; 조한욱, 「역사가의 직업적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에 대한 고찰 -」, 『역사와 담론』 69, 호서사학회, 2014.

구도로 제시되었다. 먼저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를 비롯한 지지자, 당시 정부와 ‘뉴라이트’ 세력 등(이하 교학사 교과서 지지자)이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하고 현장에 배포하려 하였던 것에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비판 논리가 제시되었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를 비판하는 연구자(이하 교학사 교과서 비판자)들은 교학사 교과서 서술이 객관성과 균형성을 결여한 ‘편향적’ 관점을 담고 있는 “역사왜곡”이라는 논리도 제시하였다. 이상의 비판은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져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지지자들은 교과서 비판자들이 교과서 비판을 위해 제시하였던 논리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교학사 교과서 비판의 입장에 서게 되면서 언뜻 유사해보이는 이상의 논리들을 교학사 교과서 비판을 위해 제시하였다. 그러한 연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학사 교과서 비판자들의 비판 맥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 정치권력의 검정 과정 개입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과목은 원래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10학년 ‘역사’ 과목으로 개설될 예정이었다. 이전의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10학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사’ 과목이 배정되었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계하고 근·현대사의 비중을 높인 ‘역사’ 과목이 새로이 10학년에 배정되었던 것이다. 이는 근·현대사 교육의 강화, 세계사 교육의 정상화, 역사교육의 계열성 확보라는 역사교육계의 요구가 ‘역사교육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용된 결과였다.³⁰⁾ 따라서 10학년 ‘역사’ 과목의 목표 역시 ‘우리나라와 세계 역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현대와 가까운 과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현대 세계와 우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확대한다.’ 등으

30) 양정현,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검정의 양상」, 『역사교육연구』 12, 한국역사교육학회, 2010, p.158; 김민수, 「학교 역사지식의 구성 :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p.37-38.

로 설정되었다.³¹⁾

… (중략) …

이렇게 역사교과서 발행 목적의 是非를 따지며 교학사 교과서 발행의 정치적 목적을 비판한 것은 교학사 교과서가 담고 있는 서술도 역사해석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용인할 수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논리는 교학사 교과서가 담고 있는 역사인식의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2. ‘친일·독재 미화’ 비판의 딜레마

교학사 교과서 발행의 정치적 목적을 지적하는 것은 곧 교학사 교과서 지지자들이 교과서에 담으려 하는 역사인식·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우선 “역사왜곡”³²⁾ 혹은 “역사훼손”이라는³³⁾ 비판이 주목된다.

… (중략) …

교학사 교과서의 발행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 때부터 이어졌던 정치권력 개입의 결과였기에 역사(교육)학계에도 교학사 교과서 비판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 서술 내용에 대한 학술적 비판에서 더 나아가 ‘친일·독재 미화’라는 ‘편향성’을 지적하는 정치적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편향성’은 정치권력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비판할 때 설정했던 수사적 프레임이었으나 역으로 교학사 교과서의 비판을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이렇게 정치권력이 설정한 프레임 안에서 제기된 ‘편향성’에 대한 비판은 역설적으로 다양성이라는 수사를 정치권력이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3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 - 79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I)」, 2007년 2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中 제2장 교과와 특별 활동 3-2. 역사.

32) 김승은, 앞의 논문, 2013; 지수걸, 앞의 논문, 2013, p.44.

33) 김승은, 위의 논문, 2013, p.32.

3. 검정 취소 요구의 딜레마

교학사 교과서 서술의 ‘친일·독재 미화’를 비판하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교학사 교과서 비판자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불량품” 혹은 “잡서”라고 지칭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였다.

… (중략) …

이와 같은 학문적 비판과 정치적 비판의 혼재는 이후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의 과정에서 드러난 검정제의 딜레마가 국정화 국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화 비판 논리를 두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고 두 갈래의 비판이 갖는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IV.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 예고」를 통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공식화했다.³⁴⁾ 이후 20일 가량의 의견 검토 기간을 거쳐 11월 3일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이하 국정화)가³⁵⁾ 확정 공표되었다.³⁶⁾ 교학사 교과서 논쟁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이 감지되기도 하였는데,³⁷⁾ 특히 2015년 초 당시 교육부 장관은 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였다.³⁸⁾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정화에 대한 반발 여론이 워낙 거세어 교육부가 국정화 대신 검정강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도되었다³⁹⁾



[그림 1]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한겨레신문)

-
- 34) 교육부 공고 제 2015 - 216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 예고,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 장관.
- 35) 본고에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논쟁에 한정하여 분석을 전개하고 있으나 국정화 추진의 대상이 된 교과서가 한국사 영역에 해당하는 역사교과서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역사교과서 국정화’라고 지칭할 것이다.
- 36) 교육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제출 의견 처리 결과 공표”, 2015년 11월 3일,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141&boardSeq=61184&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37&s=moe&m=040401&opType=N>.
- 37) 홍후조, “[이슈 기고] 국사 교과서, ‘國定’으로 되돌려야 한다”, 『조선일보』, 2014년 1월 8일, A31면; 이재범, “[시론] 史觀이 통일된 한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 『조선일보』, 2014년 9월 2일, A33면 등.
- 38) 노재현 기자, “황우여, ‘역사, 한가지로 가르쳐야’ … 국정화 시사 논란”, 『연합뉴스』, 2015년 1월 8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08/02000000000AKR20150108089851004.HTML>(“역사를 3가지, 5가지로 가르칠 수 없다. 학생들을 채점하는 교실에서 역사는 한가지로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책임”).
- 39) 전정윤 기자, “[단독] “황우여, 교과서 국정화 대신 ‘검정강화’ 연구 특별지시”, 『한겨레신문』, 2015년 9월 25일, A3면.

이 시기의 국정화 관련 논문은 대체로 국정화 담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2014년과 국정화가 공식화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5년 말, 2016년 초에 걸쳐 발표되었다. 그리고 거세었던 국정화 반대 여론의 흐름에 따라 대체로 당시 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비판하였다.⁴⁰⁾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발행제도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관련 논문들은 단순히 바람직한 역사교과서 발행제도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국정화 추진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정화 추진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관련 논문에서 국정화를 비판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① 유신 체제 하에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해 본 결과 항상 해당정권의 역사인식을 대변해왔으며, 오히려 정부 주장과 반대로 편향적인 역사인식을 심어주어 지배 질서 유지를 위한 경직된 역사인식과 역사관을 강요해왔다.⁴¹⁾

○-② 실제로 반대 운동의 현장에서는 ‘친일독재 미화 반대’란 구호만큼이나 ‘권력의 역사 통제 반대’, ‘획일적 역사관 주입 반대 - 역사해석의 다양성 보장’과 같은 구호가 제창되었다.⁴²⁾

○-①~②에서는 공통의 비판 논리 세 가지가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첫째, 국정화 추진 과정과 그 목적 자체 즉, “권력의 역사 통제”를 통해 “해당정권의 역사인식을 대변”하는 것의 문제이다. 둘째, 국정화에 따라 단일본으로 발행될 국정교과서의 “획일적” 역사관과 “경직된” 역사인식의 문제이다. 셋째, 국정교과서가 담게 될 ‘친일·독재 미화’라는 역사인식의 ‘편향성’ 문제이다. 세 가지 비판 논리는 이전의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의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제시되어왔다. 따라서, 국정화 비판의 논리가 제기된 맥락과 그러한 비판이 노정하는 딜레마를 중심으로 국정화 논쟁을 검토해보겠다.

40) 도면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순종하는 국민’ 만들기인가?」, 『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2014; 류승렬, 앞의 논문, 2014; 김한중, 앞의 책, 2015; 서인원, 앞의 논문, 2015; 김육훈, 「국정교과서 논란을 넘어서」, 『황해문화』 90, 새얼문화재단, 2016.

41) 서인원, 위의 논문, 2015, p.307.

42) 김육훈, 앞의 논문, 2016, p.252.

1. 정치권력의 개입 강화와 국정화

국정화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력이 ‘편향성’ 논쟁에 좀 더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또한 ‘편향성’ 논쟁에 개입하고자 했던 이전의 시도들에서 정치권력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국정화를 확정 공표한 당일 당시 국무총리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⁴³⁾ 통해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 (중략) …

그런데 “올바른” 역사인식으로서의 국가주의적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을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주의적 역사인식이 “올바른” 역사인식이 아니라는 비판 즉, ‘친일·독재 미화’의 ‘편향성’을 갖는 역사인식이라는 비판이다. 둘째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올바른”이라는 기준 자체가 부당하며 그 기준이 국정제하에서 역사인식의 획일화로 드러날 것이라는 비판이다. 따라서 두 가지 비판을 나누어 살펴보면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비판의 논리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한 부정

두 가지 비판 중 두 번째 비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하여 국정화 비판자의 한 논문에서는 국정화가 가져올 획일화의 문제점이 교육적 측면에서 정리된 바 있다.

43) 국무조정실, “황 총리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15년 11월 6일, http://www.korea.kr/policy/cultureView.do?newsId=148802862&call_from=naver_news.

… (중략) …

한편, “올바른” 역사인식이라는 프레임이 ‘편향성’ 논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떠한 입장에 서있느냐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일례로 “집필자의 과도한 편향성을 막는다”는 구실로 마련된 집필기준에 ‘우파의 시각’이 반영되어 왔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⁴⁴⁾ 국정화 지지자들이 내세웠던 “올바른” 역사인식은 결국 그러한 ‘우파의 시각’ 즉, 국가주의적 역사인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파의 시각’에 대한 비판, 국가주의적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올바른” 역사인식이 아니라는 차원에서도 제기되었다.

3. “올바른” 역사인식 비판의 딜레마

국정화에 대한 비판은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퇴보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지만 국정화의 산물인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그런데 국정화는 국정화 지지자들의 국가주의적 역사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고,⁴⁵⁾ 그러한 역사인식을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규정하며 추진되었다. 그렇기에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곧 그것이 담게 될 국가주의적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였다.

… (중략)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고되었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중 ‘교과서 서술 방향’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⁴⁶⁾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44) 류승렬, 위의 논문, 2014, p.316.

45) 류승렬, 위의 논문, 2014, p.303.

4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 2018 - 68호,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 실시 공고」, 2018년 7월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1.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의 주안점과 교과서 서술 방향

가. 집필기준 개발의 주안점

...

나. 교과서 서술 방향

...

- 2) 특정 사건에 대한 학설이 여럿이 경우,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학설을 따르
되, 새롭게 발굴된 사료와 최신 연구 성과를 수용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
게 서술한다.

...

- 4)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학생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

[표 2]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서술한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라는 항목은 이전의 교과서 집필기준에도 큰 차이 없이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다. 이와 같은 문구만 보았을 때는 원론적으로 별 문제 없는 적절한 기준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은 이러한 기준이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논쟁의 과정에서는 두 항목이 상충하는 양상으로 논리가 제시되었다. 그렇기에 해당 문구의 의미를 ‘편향성’ 논쟁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 (중략) ...

그러나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서술한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적용해왔던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에서의 논리는 모순되지 않을 수 있는 두 항목을 논리적인 모순에 빠뜨리게 되었다. 더구나 교학사 교과서와 국정화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역사(교육)학계의

연구자들조차 정치권력에 의해 설정되었던 ‘편향성’이라는 프레임을 역이용하게 되었다. 학문적 비판과 정치적 비판을 동반한 대응은 검정제를 통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해야 하는가,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한 개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가라는 딜레마를 야기하였던 것이다.

V. 결론

기존의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연구는 대체로 국정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해왔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경향에 기반한다. 첫째,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역사해석을 담을 수 있어야 함을 전제하였다. 둘째, 다양한 교과서의 발행을 저해하는 정치권력의 개입 배제와 역사교과서 발행의 자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셋째, 이를 위해서 국정제보다는 검정제, 궁극적으로는 자유발행제의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기 이후 중등 한국사 영역의 교과서가 검정제를 통해 발행되면서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편향성’ 논쟁에서는 이러한 연구 경향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딜레마가 포착된다. 제7차 교육과정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쟁의 과정에서 당시 정부는 교과서의 ‘편향성’을 빌미 삼아 검정 절차를 악용한 개입을 시도하였다. 그러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지지자들의 반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역사인식의 차이를 인정하는 검정제 아래에서 ‘편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하며, 검정 절차를 강화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이 아님을 해명하는 한편 ‘좌편향’ 비판을 가하는 비판자들의 역사인식이 오히려 ‘편향적’임을 지적하는 반박도 이루어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 이르러 ‘좌편향’ 교과서에 반대되는 역사인식을 담은 교학사 교과서가 정치권력의 비호 속에 검정을 통과하였다. 여기서 ‘편향성’ 논쟁에서의 공방이 전도되었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지지자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비판하게 되었다. 우선 교학사 교과서 비판자들은 교과서가 무수한 오류와 더불어 ‘친일·독재 미화’라는 역사인식의 ‘편향성’을 갖는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부당하며 검정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정치권력이 검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제기되었다는 의의가 있으나, ‘편향성’ 비판과 ‘검정 취소’ 요구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옹호의 논리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낳았다.

이윽고 정치권력은 다양성을 표방했던 검정제가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거의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내재해있었다. 당시 정부는 국정화를 추진하여 교학사 교과서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국정화 비판자들은 국정화가 검정제 시행의 취지인 ‘다양성’을 저해하고 역사인식의 획일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비판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국정교과서 서술에서 드러날 ‘친일·독재 미화’의 ‘편향성’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획일화에 대한 우려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정치권력의 프레임을 극복하는 차원의 비판이었던 데 반해 ‘편향성’에 대한 지적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권력의 프레임을 또다시 역이용한 비판이라는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이상의 딜레마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대응해야 하는 ‘편향성’ 논쟁의 상황에서 학문적 비판과 정치적 비판이 뒤섞인 데 기인한다. 이 과정에서 ‘역사해석의 다양성 보장’, ‘역사인식의 차이 용인’, ‘검정의 완화를 통한 자율성 확보’와 같은 방어적 논리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해석의 결여’, ‘역사인식의 편향성’, ‘부실한 검정 절차’라는 비판의 논리가 모순적으로 공존하게 되었다. 이는 국정제보다는 완화된, 그러나 자유발행제에 비하면 여전히 강한 통제성을 갖는 검정제의 양면성이 ‘편향성’ 논쟁의 각 국면에서 필요에 따라 강조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서론에서 제기한 세 가지 의문에 답하는 것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 발행에 역사해석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자유발행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좌편향’이나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인식을 담은 교재도 용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은 역사해석의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쟁의 과정이었다. 이는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해한 결과였다.

둘째, 역사해석의 다양성 저해를 정치권력의 개입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에서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역사(교

육)학계에서도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포괄할 수 없는 역사해석 혹은 역사인식을 지목한 바 있다. 교과사 교과서의 역사인식을 ‘친일·독재 미화’로 규정하고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정치권력의 프레임을 역이용하여 접근했던 것은 역사(교육)학계의 입장에서조차 다양성을 용인할 수 없는 한계 지점을 노정하였다.

셋째, 자유발행제를 시행하면 과연 교과서 발행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은 특정한 역사인식을 담은 교과서의 ‘편향성’을 비판하고, 그러한 ‘편향적’ 교과서의 배제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다양성과 자율성의 실체가 정리되고 합의되지 않는 한, 자유발행제의 시행은 또 다른 교과서 논쟁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쟁을 통해 드러난 역사교과서 검정제의 딜레마는 다양성과 ‘편향성’에 대한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가 야기한 난맥상이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학계에 좀 더 무거운 권한과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집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서술한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와 같은 항목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전문성을 가진 역사학계의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권한을 가진 역사학계에는 정치권력의 정치적 비판에 휘말리는 대응방식보다는 그들이 설정한 프레임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 (중략) …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고에서의 논지에 기반하여 특정 역사인식에 따른 역사해석과 교과서 ‘편향성’ 비판의 사례를 검토·분석하면서 이상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러한 작업은 본고의 논지를 뒷받침하면서도 검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후속 연구 이외에도 본고의 시도가 역사교과서 검정제를 비롯한 발행제도 논의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보고서

- 교과서포럼,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기파랑, 2008.
- 김기협, 『김기협의 역사 에세이 : 뉴라이트 비판』, 돌베개, 2008.
- 김한중, 『역사교육으로 읽는 한국현대사』, 책과함께, 2013.
- _____, 『역사 교과서 국정화, 왜 문제인가』, 책과함께, 2015.
- 박효종 외, 『빼앗긴 우리 역사 되찾기 : 교과서포럼이 해부한 ‘왜곡’의 진상』, 기파랑, 2006.
- 역사교육연대회의, 『뉴라이트 위험한 교과서, 바로 읽기』, 서해문집, 2009.
- 역사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살아있는 삶을 위한 역사교육』, 푸른나무, 1993.
- 이찬희 외, 「국사 교과서 발행제도와 검정제의 검토」(연구보고서 11-02), 미래한국재단, 2011.
- 정경희,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비봉출판사, 2013.

일반논문

- 고영진, 「[시론] 개봉박두! ‘국정교과서의 추억’」, 『역사와 현실』 91, 한국역사연구회, 2014.
- 고유경, 「변화하는 독일 역사 교과서 - 자유발행제와 다원주의적 정체성을 향하여」, 『역사비평』 108, 역사비평사, 2014.
- 구경남, 「1970년대 국정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애국심 교육과 국가주의」, 『역사교육연구』 19, 한국역사교육학회, 2014.
- 권오현, 「한국과 일본의 닮은 꼴 역사교과서 논쟁」, 『역사와 교육』 9, 역사교육연구소, 2014.
- 김기봉, 「역사교과서 논쟁 어떻게 할 것인가 - ‘역사의 정치화’에서 ‘정치의 역사화’

- 로의 전환을 위하여, 『역사학보』 198, 역사학회, 2008.
- _____, 「미국의 역사전쟁에 비춰보는 한국사교과서 논쟁」, 『철학과 현실』 90, 철학문화연구소, 2011.
- 김민수, 「역사교과서 문제의 교재화와 학습자의 인식」, 『역사와 세계』 35, 효원사학회, 2009.
- _____, 「역사교과서 서술의 교재화」, 『역사교육연구』 28, 한국역사교육학회, 2017.
- 김승은, 「이명박 정권 이후 보수세력의 역사왜곡」, 『내일을 여는 역사』 52, 내일을 여는 역사, 2013.
- 김육훈,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한국사 교과서 논란」, 『역사와 교육』 9, 역사교육연구소, 2014.
- _____, 「국정교과서 논란을 넘어서」, 『황해문화』 90, 새얼문화재단, 2016.
- 김정옥, 「역사 교과서 논쟁에 관하여 미국의 교과서 발행제도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역사와 문화』 26, 문화사학회, 2013.
- _____, 「미국 역사교과서 논쟁을 통해 본 교과서 발행제도의 문제: 한국의 역사교과서 논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총』 8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5.
- 김정인, 「역사 교과서 논쟁과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역사교육』 133, 역사교육연구회, 2015.
- 김주환,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쟁과 개편방향 -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7-1, 대한정치학회, 2009.
- 김태우, 「역사교과서 이념논쟁과 학문의 위기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현대사 서술 비교」, 『역사와 현실』 92, 한국역사연구회, 2014.
-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비평』 15, 역사비평사, 1991.
- _____,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의 전말과 쟁점」, 『역사와 세계』 35, 효원사학회, 2009.
- _____,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파동’이 남긴 문제들」, 『역사와 현실』 73, 한국역사연구회, 2009.

- _____, 「한국사 교과서 검정 파동의 원인과 과제」, 『역사와 현실』 92, 한국역사연구회, 2014.
- 도면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순종하는 국민’ 만들기인가?」, 『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2014.
- 류승렬, 「국사교과서 편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역사교육』 76, 역사교육연구회, 2000.
- _____, 「국사 교과서 편찬과 자유발행제」, 『한국사론』 31, 국사편찬위원회, 2001.
- _____, 「한국사 교과서 발행 국정화 담론의 맥락과 성격」, 『역사교육』 132, 역사교육연구회, 2014.
- 박준성, 「올바른 역사 이해와 ‘국정’ 국사교과서의 문제점」, 『교과교육』 1, 푸른나무, 1988.
- 박진동, 「해방후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추이」,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 박태균, 「한국현대사의 논쟁에 대한 재평가와 교과서 수록 방안」, 『역사학보』 205, 역사학회, 2010.
- 백은진, 「무엇을 위한 역사교육이어야 하는가? - 국가교육과정, 정부의 역사교육 정책, ‘국가주의’ 비판 담론에 대한 분석」, 『역사교육연구』 22, 한국역사교육학회, 2015.
- 서인원, 「역사교과서 검정발행제 분석」, 『역사와 실학』 32, 역사실학회, 2007.
- _____, 「중등 “역사”·고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론」, 『역사와 실학』 58, 역사실학회, 2015.
- 송상헌, 「역사교육에서 역사교과서의 성격 규정 문제」, 『사회과교육』 51-2,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2.
- 신병철, 「국정 국사 교과서 개발 과정과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역사교육』 79, 역사교육연구회, 2001.
- 양정현, 「역사 교과서 서술에서 사실과 관점 -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지시 파동을 중심으로 -」, 『역사와 세계』 35, 효원사학회, 2009.
- _____,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검정의 양상」, 『역사교육연구』 12, 한국역사교육학회, 2010.

- _____, 「2007, 2011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논리와 계열성」, 『역사교육』 120, 역사교육연구회, 2011.
- _____, 「역사교육에서 사실, 해석, 그리고 주체와 관점 -2013년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9, 역사교육연구소, 2014.
- _____, 「한국사 교과서 발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역사와 현실』 92, 한국역사연구회, 2014.
- 양호환, 「역사적 사실의 특징과 역사교육의 특수성」, 『역사교육』 113, 역사교육연구회, 2010.
- _____, 「역사 텍스트 독해를 둘러싼 동향과 쟁점」, 『역사교육』 142, 역사교육연구회, 2017.
- 윤종배, 「역사 교과서 파동의 전말과 우리의 대응」, 『내일을 여는 역사』 35,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 윤종영, 「국사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고찰」, 『문명연지』 1-2, 한국문화학회, 2000.
- 윤해동, 「뉴라이트 운동과 역사인식 -‘비역사적 역사’」, 『민족문화논총』 5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이기훈, 「그들의 대한민국 역사: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역사 인식」, 『진보평론』 58, 진보평론, 2013.
- 이명희, 「제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역사교육』 82, 역사교육연구회, 2002.
- _____, 강규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회과교육』 48-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9.
- 이병희, 「국사교과서 국정제도의 검토」,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 이신철, 「[시론] 새 정권과 역사교과서 흔들기」, 『역사와 현실』 68, 한국역사연구회, 2008.
- _____, 「한국사 교과서 발행의 과거와 현재」, 『내일을 여는 역사』 35,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 _____, 「탈식민·탈냉전·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역사문제연구』 30, 역사문제연구소, 2013.

- _____, 「식민주의와 민족주의의 함정을 넘어서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육)논쟁의 본질을 향한 탐색-」, 『역사와 현실』 100, 한국역사연구회, 2016.
- 이준식, 「한국 역사 교과서인가, 아니면 일본 역사 교과서인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일제강점기 서술 비판」, 『역사비평』 105, 역사비평사, 2013.
- 임병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그 이후?」, 『역사교육연구』 24, 한국역사교육학회, 2016.
- 전상인, 「〈교과서포럼〉 창립기념 심포지엄 -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과정 -」, 『사학』 111,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5.
- 정경희, 「역사교육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이념논쟁 비교」, 『미국학논집』 40-3, 한국아메리카학회, 2008.
- 조한욱, 「역사가의 직업적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에 대한 고찰 -」, 『역사와 담론』 69, 호서사학회, 2014.
- 주진오, 「뉴라이트의 식민사관 부활 프로젝트 -근대 초기 서술의 문제점」, 『역사비평』 83, 역사비평사, 2008.
- 지수걸, 「‘한국 근현대사 논쟁’과 10학년 『역사』 교과서 편찬」, 『역사교육』 109, 역사교육연구회, 2009.
- _____, 「교학사판 『한국사』의 논리와 책략」, 『역사비평』 105, 역사비평사, 2013.
- 최영진, 「역사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한계」, 『의정연구』 47,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6.
- 최영태, 「카(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활용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논쟁의 해결을 위한 시론」, 『서양사학연구』 32, 한국서양문화사학회, 2014.
- 최용규, 「역사를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교과서」, 『교과서연구』 16,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3.
- 하일식, 「고교 ‘국사’의 발행제 변천과 전근대 서술 - 권력의 의도와 교과서 서술 -」, 『역사와 현실』 92, 한국역사연구회, 2014.
- 하종문, 「[쟁점] 반일민족주의와 뉴라이트」, 『역사비평』 78, 역사비평사, 2007.
- 한철호, 「『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과 교육과정 개정 일정의 문제점」, 『한국사연구』 153, 한국사연구회, 2011.

- 홍석률, 「‘대안 교과서’의 난감한 역설 -현대사 서술 분석」, 『역사비평』 83, 역사비평사, 2008.
- 홍선이, 「‘한국사 교과서’ 조선 후기 신분제 내용의 획일과 고착」, 『역사교육』 137, 역사교육연구회, 2016.
- 황현정, 「역사 교사의 교육의 자율권과 자유발행제 탐색」, 『역사와 교육』 16, 역사교육연구소, 2017.

학위논문

- 김민수, 「학교 역사지식의 구성 :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정태운, 「2002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전·현 정부 서술 논란’에 대한 역사교육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기타 자료

- 김낙년,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역사인식 : 생산적 논쟁을 위하여」, 『현대사광장』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3.
- 김성보, 「[책머리에] 역사교과서, 진정 무엇이 문제인가」, 『역사비평』 85, 역사비평사, 2008.
- 역사교육연구소 편집부, 「한필협, ‘한국사’ 재검정 논란에 관한 성명서(2013.09.15.)」, 『역사와 교육』 9, 역사교육연구소, 2014.
- 이성호, 「‘한국사 교과서 논란’ 관련 일지」, 『역사와 교육』 9, 역사교육연구소, 2014.
- 임경석, 「[여는 글] 위기의 역사 교과서」, 『내일을 여는 역사』 35,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경향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노컷뉴스』
『연합뉴스』
『쿠키뉴스』
『MBC NEWS』

국회의회록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http://theminjo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홈페이지, <http://www.ktbook.com>.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NCIC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ncic.go.kr>.

[참고문헌(References) 또는 서지(Bibliography) 필수 작성]

참고문헌(References)은 본문에서 인용되거나 참고한 자료를 작성한 목록을 말한다. 서지(Bibliography)는 엄밀한 의미에서 참고 문헌(References) 뿐만 아니라 음반, 면담, 영화, TV프로그램, 그림 등 비문자 자료를 모두 포괄한다.

참고문헌은 서지관리 프로그램(Endnote, Mendeley 등)을 사용하여 학문분야 특성에 맞게 저자 이름순 혹은 인용순 등으로 일관된 양식으로 작성한다.

서지관리 프로그램 링크

<https://library.korea.ac.kr/research/writing-guide/endnote/>

<https://library.korea.ac.kr/research/writing-guide/mendeley/>

부록

A. 부록내제목

[부록(appendices or supplementary materials) 선택 작성]

부록의 각 장은 영문 알파벳을 사용하여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색인

[색인(index) 선택 작성]